## 행정망 복구됐지만 … 원인도 대책도 못 내놓는 정부

"먹통 원인 분석 중" 말만 되풀이…L4 스위치 작동 이상 배경 설명 못해행안부 늑장 대응 비판·대기업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개선 목소리도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 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 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IT 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

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산망 마비 원인을 행정전 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의 인증시스템 중 하 나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내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사용자 인증 절

차에 문제가 생겼고, 이는 사용자 접속 장애를 불러 와 새올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중단 됐다는 것이다.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팀이 18일 새벽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했고, 안정화 작업을 거쳐 행 정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 원인으로 지목된 'L4 스위치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 자세한 원인 설명은 내놓지 못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L4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T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사고 대응을 두고 이 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용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IT 기업이 사흘째 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 발표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산망 마비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 작도 나오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

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산망 사태를 둘러싼 행안부의 대응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오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았고, 오후에야 보도자료로 대응 사실을 전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전산망 중단은 재난요건에 맞지 않아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 으로, 서버가 불에 타 막대한 손실이 난 카톡 먹통 사태 때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간병비 삭감 예산 복원·건보 급여화 추진"

민주당 최고위…재생에너지 확대·외교 노선 다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또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 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 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 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이번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 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 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국에너지공과대 사업 예산 127억 증액

민주, 원자력발전 1875억 감액안 단독 의결…與 반발 회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

이날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 조1926억원 증액, 1875억원 감액돼 총 2조51억 원 순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1000억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예산, 250억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예산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천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302억원), 신재 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 신재생에너 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원 등도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도 원전 R&D 예 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 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 된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 한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 1조 8893억원을 정부안에서 증액 의결했다.

청년 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 900억원도 증액됐다. /연합뉴스

## 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사과

"파격 콘셉트 세심히 못살펴"…청년 캠페인 행사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빚은 현수막 문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해당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려고 했던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 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책임을 업 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 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 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당과 관련이 없고 업체에서 해당 문구를 만든 것이 라고 해명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자 했던 오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갤럭시 프로젝트'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기획한 청년 관련 캠페인 행사다.

조 사무총장은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여기서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지난 17일부터 게시하기 시작한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 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 청년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 거지자 '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 안 팎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오광록기자 kroh@



